

요약

서울시민 3/4분기 체감경기는 지난 분기보다 개선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0년 3/4분기 87.9로 전 분기 대비 1.8p 증가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2.0p 상승한 74.4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1.9p 상승한 93.2를 기록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97.3으로 전 분기 대비 2.0p 올랐으며, 「미래소비지출지수」도 전 분기보다 2.0p 상승한 83.3을 기록했다.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의류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 분기보다 상승했으며, '식료품비'가 전 분기에 견줘 3.0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정부 부동산 대책, 20% “긍정” 31% “보통” 49% “부정적”

서울시민의 84.7%가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0.3%에 머문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9.0%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 긍정적인 이유로는 '부동산 투기 감소'(40.3%)가 가장 많았으며, 부정적인 이유는 '집값 상승'(43.2%),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불안감 상승'(29.8%) 순으로 조사되었다. 1년 뒤 서울 집값은 '상승할 것'(42.0%)이라는 응답이 '하락할 것'(14.4%)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 BSI는 3개월 연속 하락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BSI」는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월 이후 가장 낮은 65.9를 기록했다. 9월 소상공인 「전망경기 BSI」는 7월과 8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9월에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전통시장 「체감경기 BSI」는 5월 최고치 기록 이후 연속 하락하면서 50.3을 기록했다. 전통시장의 「전망경기 BSI」는 7월과 8월 연속 하락하다가 9월에 전월보다 11.5p 오르면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소상공인의 O2O 눈높이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해야

민생현장 인터뷰 결과,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이 증가하긴 했지만 코로나19의 2차 유행, 긴 장마, 급식 중단, 불경기 등의 이유로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판매 서비스의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통시장도 비대면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추세다. 이미 서울시 소재 일부 전통시장은 네이버, 쿠팡, 놀러와요 시장 등 플랫폼 업체와 연계하여 온라인 주문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회사들은 온라인 주문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과 배달 인프라 구축 등을 회사 차원에서 일괄 처리해주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 점포의 입지적 약점 극복 가능, 고객 후기 활용 편리, 가게 홍보 용이 등의 장점도 있어 O2O에 관심을 갖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도입 초기만큼 O2O를 이용한 전통시장의 활로 개척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다. 아직까지는 온라인 주문배달 서비스에 가입한 점포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이상의 상인들은 디지털 적응력이 낮은 편으로 비대면 환경의 심리적 장벽이 높아 O2O 서비스 도입이 쉽지 않다. 또한, 전통시장 내 온라인 주문배달 서비스가 활발한 업종은 소포장이 가능한 먹거리(예. 반찬, 분식, 베이커리, 정육, 과일 등)에 한정되어 있어 온라인 주문배달 서비스 이용에 소외되는 업종도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와 정부는 온라인 주문배달 플랫폼 회사와 협업해 온라인 주문배달 판매가 생소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으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전통시장 내 O2O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에서 소외되는 업종 배려, 디지털 교육 매니저의 현장(시장) 파견을 통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배달 라이더들의 접근이 어려운 시장 내 인력 지원, 온라인 내 전통시장의 판매 차별화 전략 마련 등 소상공인의 O2O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